

지구적 변환, 아시아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역할*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 글은 세계화로 대표되는 지구적 변환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시아의 부상을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이 아닌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헤게모니 이동으로 해석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구적 변환의 핵심 요소로서 세계화의 복합적인 효과를 검토하면서, 세계화가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위협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발전론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발전 경로를 유럽과 대비해 본 후,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3국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등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중층적 갈등구조를 숙고하면서, 지역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지역의 지나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경향, 지지부진한 경제적 통합 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공동체 건설을 향해 경제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대국적 팽창주의의 희생자였던 한국이 비(非)팽창주의적 입장을 통해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세계화, 아시아의 부상,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비팽창주의적 입장, 한국의 소명

오늘의 세계는 혼란스럽다. 일찍이 마셜 맥루한(H. Marshall McLuhan)이 ‘지구촌(global village)’이란 말을 쓴 후 인류는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약탈로 얼룩진 지구(global pillage)’가 되고 있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실상 세계는 곳곳에서 문화 충돌, 인종 분쟁, 민족 갈등의 형태 아래 전쟁, 폭력, 테러가 끊이지 않고 빈곤, 기아, 압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질서를 보더라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무극(無極) 혹은 비극(非極)의 관점으로 ‘G-0’이라는 세계 무(無)질서의 미래가 운위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가름했던 패권체제 대신에

* 이 글은 2011년 5월 24일 열린 포스코아시아포럼에서 기조발표문으로 작성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기조연설의 기회를 준 포스코청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점증하는 지역 블록화 아래 다(多)중심적인 힘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Pieterse, 2011: 123). 그러나 중국이 부상하고 유럽이 쇠퇴하면서 세계모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G2의 대열에 중국이 유럽을 대신하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의 세계모니가 네덜란드-영국-미국-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태평양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힘의 이동’은 이러한 세계의 재편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I. 세계 속의 아시아

문명사적으로 아시아가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 지역으로까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이 만들어낸 원래의 근대(modernity)에 대해 아시아가 제2의 근대(second modernity)로 도전하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아시아는 유럽중심주의 아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서구적 척도에 의해 폄하되어 왔다. 유럽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생동적이라면, 아시아는 특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정체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그것이다(Said, 1978).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가 부와 권력이나 지식과 문화의 창출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시아의 부상이 서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옥시덴탈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탈(脫)유럽이라는 미명 아래 나타나는 배타적 아시아주의는 결국 역(逆)오리엔탈리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앞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문명이고 영락(榮落)이 있듯이, 인류 두 번째 천 년 중 첫 다섯 세기(1,000~1,500년)는 아시아가 앞섰으나, 다음 다섯 세기(1,500~2,000년)는 유럽이 아시아를 넘어섰다(McNeill, 1963; Abu-Lughod, 1989). 나는 역사학자 바라클러프(Geoffrey Barraclough)가 지적한 대로, 모든 시대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문명의 역전’이란 것도 한 역사의 종말이라기보다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고 싶

다.

유럽의 흥기는 아시아의 선진된 문화 유산을 과학 기술의 혁명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류 두 번째 천 년이라 할 서기 1,000년경 중국과 중동은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었던 반면, 로마의 인구는 450,000명에서 35,000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이슬람 지배 아래의 스페인 코로도바는 500,000명의 주민이 살았고, 바그다드는 백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운집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9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동안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문명의 정수를 담은 서적을 수집, 번역, 종합하였고, 유럽은 이를 과학 기술의 혁명을 통해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어감으로써 아시아를 앞지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¹ 유럽, 북미 대륙과 더불어 아시아는 근대 산업 세계의 3대 지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은 비(非)서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근대화를 달성하였으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네 마리의 용(Four Dragons)’으로 불리며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후 ‘다섯 마리의 호랑이(Five Tigers)’라 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새로운 공업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친디아(CHINDIA)’로 호칭되는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정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중국의 덩소평(鄧小平)과 인도의 간디(Rajiv Gandhi)의 만남에서 공론화되었던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발전의 역동적 측면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아시아의 인구와 면적은 북미, 남미, 유럽, 혹은 아프리카보다 크다.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발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1세기형 지식 기반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디지털 산업의 발달, 휴대폰의 소지, 소셜네트워

¹ 프랭크(Frank)는 아시아가 1400~1800년대 시대에 이어 다시금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동양(Orient)’이 ‘재(Re) 지향(Orient)’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Frank, 1998).

크서비스(SNS)의 사용 등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시아의 다양성 안에는 또한 공통성이 존재한다. ‘아시아적 길(Asian Way)’,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아시아적 관점(Asian View)’, 또는 ‘신아시아주의(Neo-Asianism)’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적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가 제 2의 동양적 근대라 할 새로운 인성-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교역량에서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중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 나라는 생산, 투자, 무역, 소비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은 ‘이제’,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자원 외교와 해외 원조를 통해 5대주 6대양으로 무섭게 뻗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여파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중국 산둥반도와 일본 서부 지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한국으로서는 재앙 그 자체이다. 세 나라는 에너지, 금융, 환경, 테러, 발전 등 일련의 문제에서 공통의 협력 틀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라는 먼 미래를 위해 한·중·일 세 나라는 문화와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인적·물적 소통과 교섭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향한 합의의 기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에는 통합 유럽의 지도자라는 야심을 품었던 지난날의 장 모네(Jean Monet),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드 골(Charles de Gaulle) 같은 인물이 없다. 모택동(毛澤東), 호지명(胡志明), 수카르노, 박정희(朴正熙), 이광요(李琿耀) 등 국익 수호를 위한 민족해방적 혹은 개발독재형 정치인은 있었으나 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분모 아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위한 예언자적 풍모를 지니는 걸출한 지도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중국의 ‘중화경제권’이란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구상을 넘어설 수 있는 동북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선취적이고 전향적 리더십을 한국에서 기대해 보고 싶다.

II. 지구적 변환으로서 세계화

오늘의 지구적 변환의 중심에 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세계화란 세계 전체가 국경의 벽을 넘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와중에서 과거 국가는 물론 그것의 품 안에 있었던 개인, 기업, 지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와 직접 맞상대하며 또한 여러 형태의 민간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활동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는 국제적인(international) 단계를 넘어, 다국적이고(multinational),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차원을 거쳐 전 지구적인(global)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Borrogo, 1999: 185). 그러므로 세계화는 국제화, 다국적화, 초국적화와 달리 전 지구적 현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 공간으로서 국민국가의 독자성을 침식하게 마련이다. 케네디(Paul Kennedy)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국가는 세계와 지방이라는 위아래로부터 권위의 재분배(relocation of authority) 압력을 받고 있다(Kennedy, 1993). 이 점에서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과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국가, 국제 기관 및 비(非)정부기구(NGO)들의 국가 간 그리고 초(超)정부적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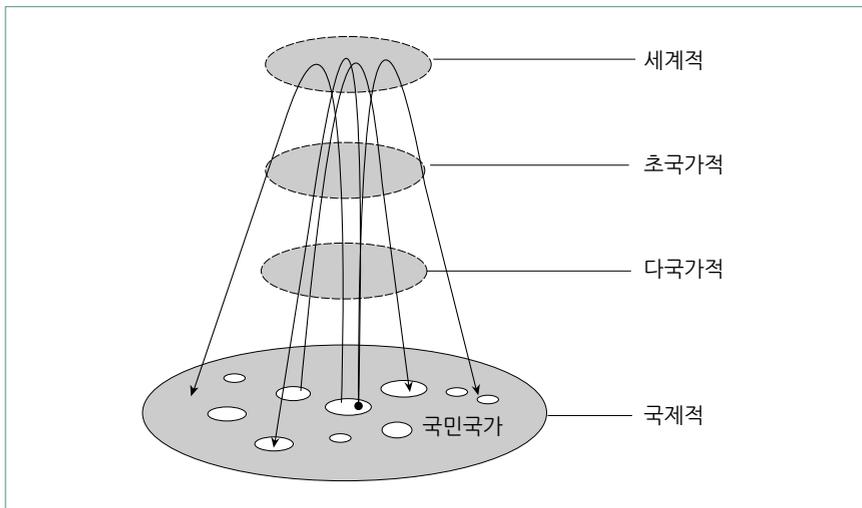


그림 1 세계화의 흐름: 국제적→다국가적→초국가적→세계적

행과 제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국제주의(complex internationalism)’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Keohane and Nye, 2001).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지식, 문화,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교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관계의 심화를 가져온다. 경제적으로 국제적 무역 및 생산의 확대, 자본 이동의 심화, 정치적으로 정부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의 혼효, 국제 정부, 비(非)정부 조직의 증대, 사회적으로 국제 이주와 관광객의 증가,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출현,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구의식(global consciousness)의 등장과 세계의 압축(compression of world) 등이 그것이다(Robertson, 1993). 이러한 전 지구적 상호 의존은 세계 곳곳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확장(stretching)과 깊은 영향을 주는 심화(deepening)의 성격을 지닌다. 이 와중에서 세계화는 지역, 국가, 지방, 기업, 개인이란 하위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세계화란 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화는 자본의 초(超)국가적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자본주의를 모태로 하여 점차 산업적 축적에서 금융적 축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 국민경제가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의 수호자로서 기업도 국적이 없어지게 된다는 주장도 있고(Reich, 1991), 이와 달리 세계화는 무역, 금융, 거시경제 정책에서 국민 경제들 사이의 상호 의존이 증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Gilpin, 2001). 어쨌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건 복수의 국적을 지닐 수 있고 나아가 지구 시민(global citizen)으로 행세할 수도 있다.

세계화의 동인은 이윤 실현을 확대하려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전 지구적 연결망을 가능케 하는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의 혁신 등 다원적인데, 초국적 기업(TNC)을 세계화의 주역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구미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타난 포드주의 이후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특징되는 축적 체제에서 초국적 기업은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의 혁신에 따른 전 세계적 연결망을 토대로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생산과 유통과 소비 과정을 총괄하면서 자본주의의 전(全) 지구적 확산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은 그 시공간적

독립성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시공간원격화(time/space distantiation) 개념에 의하면, 오늘의 세계에서 개인이나 제도는 ‘여기 있음(present)’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여기 없는(absent)’ 상대방과의 연결과 소통이 가능하다(Giddens, 1990: 18). 세계화는 ‘지방적인 것(the local)’과 ‘세계적인 것(the global)’ 사이의 체계적 상호 연결과 소통을 통해 이른바 세계지방화(Glocalization)와 지방세계화(Localization)를 이끌고 있다. 점차 ‘내가 어디 있는가’라는 절대적 위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이것을 시공간압축(time-space compression), 기든스는 시공간응축(time-space shrinkage)으로 표현한다. 세계의 모든 사건이나 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시간대에 TGIF(Twitter, Google, Internet, Facebook)라는 정보통신기구를 갖춘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다양한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집, 거리, 사무실이라는 장소의 구속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8억여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폴란드, 영국 다음으로 세계 제4위의 사용국이다. 수직적 문화를 갖는 독일과 일본보다 수평적 문화를 갖는 미국과 영국 등이 SNS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우리나라도 6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 중 2/3가 SNS를 쓰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혁명은 일반 민중을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꾸면서, SNS를 통해 국내외 주요 현안에 개입하는 ‘감독자 시민(monitorial citizen)’을 배출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다. 20세기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바일로 네트워크를 달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모래알같이 흩어진 대중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다.

마이클 페더스톤(Mike Featherstone)은 전 지구적 일치(global ecumene)를 이끄는 것으로서 지구 문화의 상호 작용의 확장과 지속적인 지역 문화와의 상호 교환을 중시한다(Featherstone, 1991: 6). 이러한 일련의 문화적 흐름은, 첫째로, 문화적 동질성과 문화적 무질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제3의 문화’로서 초국적 문화(transnational culture)의 형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국적 기업의 국경을 초월하는 활동, NGO들의 범 국제적인 활동과 정부간기구(IGO)의 확장,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전 지구적 확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이러한 전 지구적 문화 현상의 요인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Appadurai, 1991: 296-301). 첫째, 관광객, 이민, 피난민,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속적인 양상(ethnoscapes), 둘째, 다국적 기업, 직접 투자, 기술의 흐름인 기술적 양상(technoscapes), 셋째, 통화 시장과 주식 거래에서 화폐가 급속하게 이동하는 금융의 양상(financescapes), 넷째, 신문, 잡지, 텔레비전, 영화에 의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이미지와 정보 매체의 양상(mediascapes), 그리고 다섯째, 민주주의, 자유, 복지, 인권과 같은 서구 계몽주의 세계관의 요소로 이루어진 국가나 반(反)국가 운동 등 이념의 흐름인 이데올로기적 양상(ideoscapes)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예견과 달리 세계화는 ‘평평해지는’ 지구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Friedman, 2005). 비단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 영역에서의 지구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옹호론자에 대해,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반대론자가 맞서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세계화의 명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세계화론(alt-globalization)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가 자유로운 교역과 거래를 통해 지구 전체의 부를 늘림으로써 개도국들이 후진의 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들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개인, 집단, 부문, 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가 이른바 ‘20 대 80’이라는 빈부 격차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 근원으로 제국주의의 전 세계적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도 있고, 지역 수준에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거나 혹은 집합적인 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세계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² 대안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기보다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니는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 세계화를 위해 풀뿌리 시민의 역능화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Evans, 2008).

² 세계화 반대론자들 중 전자의 입장을 역세계화(rolling back globalization)라 하고, 후자의 입장도 또 다른 역세계화(global backlash)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지구의 나이는 45억 4,000만 살이다. 이러한 지구가 중병에 걸려 있다.³ 인간의 건강에 비유해보면, 지표면의 기압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강진으로 인해 부정맥 증상이 있다. 지구의 혈액인 바다가 기름과 쓰레기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좋지 않으며, 강물과 바닷물을 걸러내는 습지와 갯벌의 훼손으로 간과 콩팥 기능도 매우 나쁘다. 그리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산림의 파괴로 인해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극과 남극 상공의 오존층의 손상으로 지구의 피부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얼마 전 토플러 협회(Toffler Associates)는 2010년 이후 다음 40년간 변화할 중요한 것 40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Toffler Associates, 2010).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NGO의 권력 강화, 무력과 협상을 병용하는 스마트 파워의 유효성 증대, 개방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 접근성 증대, 나노기술의 확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 증대, SNS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 지식의 자본으로의 전화, 기후 변화에 따른 갈등 확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증가 등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GO: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초국적 행위자로서 국제 NGO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중심적 지역 행위자로서 담론과 실천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 시민사회를 이룬다. 국민국가들은 지구 시민사회 안에서 NGO들과 정책 대결, 정책 대체, 정책 강화, 정책 실현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일종의 세계시민정치(world civic politics)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방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대다(多對多)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심화가 가져오는 개방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개입을 증대시킨다. 개방 네트워크 아래 중심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면서 서로 접근성이 강화된다. 개방, 공유, 협력을 표방하는 웹2.0 시대를 맞이하여 평범한 개인들은 수동적인 지식의

³ 2011년 4월 22일 제42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중앙일보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질조사국(USG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를 종합건강 검진한 결과이다(중앙일보, 11/04/22).

표 1 토플러 협회의 '이후 40년 동안 진행될 40가지 변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s)의 권력 강화와 국가에 대한 도전 • 무력과 협상을 병행하는 스마트 파워 전략의 유효성 증대 • 세계 리더십의 변화로 인한 혼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의 접근성 증대 • 나노기술의 확산으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 • 정보 과잉으로 소중한 정보가 사이버쓰레기(cyberdust)가 될 위험 상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의 증대 •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ing)로 인한 인간관계 개념의 전면적 변화 • 소비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 •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변화 • 경제에서 장소의 중요성이 점차 소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로 다수 국가들이 갈등에 노출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로 집단행동의 증가 •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 증대

출처: Toffler Associates, 2010.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지식의 생산이라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등장한다.

- 고령화: 앞으로 20년 안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령 인구를 경제 활동 가능 인력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경험을 노동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유용하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인공 지능이 모든 일자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상징 분석, 일상 노동, 대면 노동 등으로 노동 기능의 분화가 나타난다. 미래의 대안은 경쟁력 강화라기보다 노동의 나눔에 있다.
-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비단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안보 등 인류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강수량의 변화는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인체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균, 뎅기열 등 질병 증가가 그 보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는 폭염, 한파, 가뭄, 홍수가 서로 교차하는 몰리코스터에 앉아 있다. 특히 식수와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자원 갈등, 식량 위기, 인종 청소를 가져올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인

구 이동은 국경선을 강화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III. 새로운 발전의 대안으로서 아시아의 부상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중앙,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등 여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 건설에 관한 논의가 많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아직 느슨한 협의 기구에 불과하지만 지역공동체로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APEC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지표 면적의 32%, 세계 총생산의 54%, 에너지 소비의 49%, 그리고 국제 교역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기실 EU와 NAFTA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APEC이다. APEC이 지역공동체로 거듭난다면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에서의 비중으로 볼 때 EU와 NAFTA보다 영향력이 훨씬 클 수 있다. 미국이 APEC에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또한 유럽이 ASEM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도 향후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에서 아시아 대륙이 지니는 커다란 위상과 역할에 기인한다. 아시아 대륙은 자본 투자, 기술 이전, 시장 규모, 인력 충원, 지식 생산에서 세계 여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강한 매력을 줄 수 있다.

아시아는 하나의 동일한 문명지대(civilization zone)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인종의 배경 아래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종교의 발상지로서 유교, 불교, 힌두, 이슬람, 가톨릭이 뒤섞여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의 유교, 인도의 힌두교, 태국의 불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그리고 필리핀의 가톨릭 등이 공존한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정치 체제, 경제 제도, 사회 구조, 문화 체계 등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많은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처럼 사회주의 나라도 있고,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표 2 APEC, EU, NAFTA의 비교(2009년)

(단위: 천명, 백만 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유럽연합(EU)
설립 연도	1994	1989	1993
회원 국가수	3개국	21개국	27개국
본부	-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브뤼셀
전체 면적	21,783,850km ²	62,647,000km ²	4,324,782km ²
인구 (세계 인구 중 비중)	457,285 (6.75%)	2,716,782 (40.10%)	498,643 (7.36%)
GNP (세계 총생산 중 비중)	16,329,878 (28.04%)	31,740,310 (54.51%)	16,376,781 (28.13%)
1인당 GDP (PPP)	\$35,491	\$14,352	\$30,388
상품 수출 (세계 총상품 수출 중 비중)	1,602,479 (12.86%)	\$5,335,987 (42.82%)	\$1,530,288 (16.18%)
상품 수입 (세계 총상품 수입 중 비중)	2,176,716 (17.21%)	\$5,483,280 (43.36%)	\$1,681,118 (17.41%)
서비스 수출 (세계 총서비스 수출 중 비중)	548,875 (16.57%)	\$1,232,300 (37.21%)	\$653,690 (26.06%)
서비스 수입 (세계 총서비스 수입 중 비중)	433,291 (13.91%)	\$1,185,000 (38.05%)	565 441 (23.55%)

출처: WTO 통계시스템 및 APEC 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체제 전환국들이 서로 섞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국가 개입(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자유 방임(싱가포르, 홍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 사회,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나라들은 발전 수준에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으로 나뉘어진다. 과발전의 비만형 국가군과 저발전의 빈곤형 국가군에 부가하여 후자에서 전자로 가고 있는 이행형 국가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신흥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인접국들과의 끊임없는 접촉, 교류, 교역, 전쟁 등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연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문화 및 제도적 연관성이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 아시아라는 기표 속으로 수렴된다는 점은 아시아 지역의 특징이자,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의 변별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에서 생성된 유교가 아래로는 베트남, 위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보급된 바 있다. 일본의 산업화 모델에 기반하여 후발 국가들이 선발 국가들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와 유럽은 발전의 방식과 경로에서 서로 대조적이다.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설명을 원용하여 지난날 중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부자연스럽고 퇴보적’이라고 부른 유럽식 발전 방식과 경로를 좇았다면, 중국은 ‘풍요로 가는 자연적 진보’라는 아시아적 발전 방식과 경로를 따랐다. 스미스가 지적하는 중국의 자연적 과정이란 자본이 먼저 농업, 다음으로 제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무역으로 투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가 (...) 사물의 자연적 과정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면, 부의 증대와 도시의 증가가 영토 혹은 지역의 개선과 교화에 비례하여 모든 정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달리 유럽의 근대 국가들에서는 정반대의 자연적 성장 과정이 나타났다. “우선 약간의 외국 무역을 하는 도시가 좀 더 정교한 제조업이나 원거리 판매에 적합한 제조업을 도입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외국 무역이 농업에서의 주요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스미스는 파악한다(Smith, 1961: 403-405).⁴

스미스는 중국의 국내 시장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시장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일 이처럼 거대한 국내 시장이 외국 무역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의 해외 시장에 덧붙여졌다면, 중국의 제조업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그들의 생산력은 더욱 발전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좀 더 폭넓은 항해가 이루어졌다면 중국인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실행되는 기술과 산업상의 여러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를 스스로 사용하고 제작하는 기술까지도 습득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mith, 1961: 106).⁵

⁴ Arrighi(2007: 57)에서 재인용.

⁵ Arrighi(2007: 58)에서 재인용.

왜 중국은 해양을 통한 외국 무역에 나서지 않았을까? 오늘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온갖 소비재와 생산재를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서세동점 이후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희생물이 되었던 중국으로서 무언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중국은 정화(鄭和)가 이끄는 엄청난 규모의 함대를 지니고 있었다.⁶ 서양인들은 콜럼버스를 가장 좋아하고 반대로 징기스칸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유럽을 유린한 징기스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1405년에서 1433년 사이 일곱 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횡단한 정화의 함대가 명나라 왕조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정화는 동양판 콜럼버스가 되었을지 모른다. 한 역사가는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탐험적인 항해 선단을 해외로 보냈다면, 콜럼버스가 카리브제도에 어물거리고 있기 수십 년 전에 중국의 정화함대는 일본 해류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만에 배를 타고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적고 있다(McNeill, 1988: 229).⁷

역사적으로 세계의 해계모니를 진 제국은 육상 세력과 해상 세력을 동시에 장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로마제국, 페르시아제국, 무굴제국 등이 좋은 보기이다. 정화의 함대는 무려 30년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 아프리카 동부 등 30여 개 나라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의 함대가 가져온 것은 사자, 기린, 얼룩말과 같은 이국의 동물이거나 타조 깃털, 거북이 껍질처럼 진기한 물품에 지나지 않았다(주경철, 2008: 15, 243, 509-510). 이는 사금, 보석과 같은 값비싼 재화나 감자와 같은 귀중한 식물을 가져온 콜럼버스와 비교된다. 특히 중국이 식민지 건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은 유럽과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아리기는 정화의 인도양 원정이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낮았다고 이해한다. 북방 유목민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중국 내부의 사정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원거리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국내 시장을 중시하는

⁶ 배수량 3,000톤에 이르는 보선(寶船)은 길이 150미터, 선포 60미터에 9개의 돛대를 가졌다. 바스코 다 가마의 300톤 기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를 모함으로 60여 척 대형 함선과 100여 척의 소선에 연 27,000명 장병을 통솔했다(주경철, 2008: 139-140).

⁷ Arrighi(2007: 320)에서 재인용.

비(非)대칭이 있었다는 견해이다(Arrighi, 2007: 321). 이러한 비대칭이 아니었다면, 정화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항해를 계속하여, 항해 왕자 엔리케의 원정대가 세우타의 남쪽으로 들어가기 수십 년 전에 포르투갈을 ‘발견했을’ 것이다”(Kennedy, 1987: 7).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발전 경로는 내향적이었다. 대항해는 외국 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 교역은 강조했다지만 민간의 해상 통상은 제한했고, 무슬림 상인들은 그들의 왕성한 해상 통상에 대한 갈구를 국가의 해군력이 뒤받쳐주지 못했다. 바로 유럽이 이 공백을 메웠던 것이다. 15세기 중반 중국의 해금(海禁) 정책이 유럽의 대항해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해계모니 이동을 가져오는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Abu-Lughod, 1989: 321-322).

다시 강조하자면, 유럽의 발전이 외향적이었다면 아시아의 발전은 내향적이었다. 나는 모든 국가는 힘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르면서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본다.⁸ 이 점에서 유럽의 발전 경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안팎으로 영토적 확장을 꾀하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 부의 축적을 확대하는 자본주의로 귀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발전 경로는 힘의 논리가 시장의 논리와 별도로 작용하면서 영토적 확장과 부의 축적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형성이 군사력에 입각하여 영토적 확장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부의 축적의 확대가 바깥으로 제국주의를 가져온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서로 분리되면서 자본주의의 생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리기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유럽식의 ‘자체 강화적인 주기(self-reinforcing cycle)’가 중국에 없었다고 본다. 유럽은 서로 경쟁하는 유럽 안의 국가들이 군사 기구를 만들고 그것들이 유럽 바깥의 다른 나라들을 탈취하기 위하여 팽창하고 또한 그러한 팽창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강화적 주기가 아시아에는 보이지 않았다(Arrighi, 2007: 315-316, 318). 아시아의 국가 간 국제체제 아래에서 물론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제 안의 군사적 경쟁과 체제 밖으로서 지리적 팽창은 유럽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⁸ 이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Harvey(2003); Arrighi(1983)을 참조할 것.

수 있다.

유럽의 팽창이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던 서세동점의 시기에 동아시아에 이른 바 삼걸(三傑)이 있었다. 한국의 이하응(李昞應), 중국의 이홍장(李鴻章), 그리고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이 그들이다. 명치유신 이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의 일원으로 유럽과 미국을 둘러본 이등박문은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감동을 받았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해 근대화를 달성하고 아시아 지역을 신동아공영권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야욕으로 이어졌다. 상해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의 막강한 무력시위를 본 이홍장은 청의 군사력을 선진화시켜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를 통한 근대화는 유럽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아(亞)제국주의(sub-imperialism)를 당해낼 수 없었다. 유럽이나 인접한 중국, 일본의 변화에 둔감했던 조선의 이하응은 쇄국주의를 통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득권의 바탕에 선 법고창신(法鼓創新)은 조선의 주권을 지켜내기에는 힘이 부치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은 제각기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밟아왔다. 일본은 경제와 사회를 재조직하면서 정부 지도 아래 기업을 매개로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 한국도 그러한 일본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을 수용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다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마리의 용’이나 ‘다섯 마리의 호랑이’도 결국 국가 주도 아래 수출 증진을 통한 산업화라는 방식을 좇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수 있다.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일반적 특징으로 정부의 개입과 지도,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훌륭한 교육 제도,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전략적인 산업·금융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발전주의 국가는 전후 1950년대 일본의 경제 회복과 부흥을 가져왔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1990년대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아래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의 기능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복지의 제공, 이해 갈등의 조정, 하부 구조의 건설 등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나서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주의 국가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

표 3 세계 조강 생산량 순위(2010년)

단위: MMT(백만 톤)

순위	국가	조강 생산량	순위	국가	조강 생산량
1	중국	626,654	6	한국	58,453
2	일본	109,600	7	독일	43,815
3	미국	80,594	8	우크라이나	33,559
4	러시아	67,021	9	브라질	32,820
5	인도	66,848	10	터키	29,002

출처: World Steel Association. 2010, "Crude Steel Statistics Total".

- 후기 발전주의 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 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높은 편이다. 흥미롭게도 2011년 현재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2조 달러, 그리고 한국은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⁹ 역사적으로 공업의 쌀이라 비유되는 철(鐵)의 사용량에 따라 산업화의 성패가 갈라지곤 했다. 후발 발전국이 조강 능력 제고를 통해 선발 발전국을 따라잡으려 한 지난날의 산업화 경험이 이를 잘 웅변해 준다. 독일이 영국, 미국이 유럽, 그리고 일본이 유럽과 미국을 쫓아가려고 철강 산업을 키우려 했다. 한국도 1968년 포항제철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화의 도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현 시점에서 중국의 조강 능력은 세계 최대이고, 그 뒤를 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 한국이 따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공업의 쌀이라 할 반도체(semi-conductors)의 생산량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표 4는 세계 10대 기업체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섯 개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2001년 WTO 가입을 전기로 유인 우주선 신주(神舟)를 성공시킨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엑스포를 통해 세계 강국의 위상을 굳히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가까운 시간 안에 50여 개 기업을 세계 500대 기업으로 키우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

⁹ 외환보유 세계 10개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8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두 나라는 브라질과 스위스이다.

표 4 세계 10대 반도체 생산 기업체

순위 2010	순위 2009	회사명	소속 국가	전체 판매량 (billion dollar)	2010/2009 변동률(%)	시장 점유율(%)
1	1	Intel Corporation	USA	40 020	+24.3	13.2
2	2	Samsung Electronics	South Korea	28 137	+60.8	9.3
3	3	Toshiba Semiconductors	Japan	13 081	+26.8	4.3
4	4	Texas Instruments	USA	12 966	+34.1	4.3
5	9	Renesas Electronics	Japan	11 840	+129.8	3.9
6	7	Hynix	South Korea	10 577	+69.3	3.5
7	5	STMicroelectronics	France Italy	10 290	+20.9	3.4
8	13	Micron Technology	USA	8 853	+106.2	2.9
9	6	Qualcomm	USA	7 200	+12.3	2.4
10	15	Elpida Memory	Japan	6 678	+74.2	2.3

출처: 위키피디아, 연도별 반도체 기업 순위.

모함을 건조하여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겨냥한 패권 국가로 나아가려 한다. 2010년 중국의 경제는 일본을 따라잡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제2위로 올라섰다. 5년 전 중국의 경제 규모는 GDP에서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였지만, 작년 일본을 추월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빠르면 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GDP에서 따라잡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라 하더라도 1인당 GDP는 여전히 세계 100위권 밖에 있는 빈국이다.¹⁰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사회적 양극화는 도시와 농촌 사이를 넘어 도시와 농촌 안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적 위화감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온포(溫飽)에서 시작하여 소강(小康)과 화해(和諧)를 거쳐 민부(民富)로 정책적 방향을 바꾸고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BRICS 포럼 정상회의와 보아오포럼 연차총회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 아래 역내 국가들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각국 실정에 맞는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워싱턴컨센서스를 대체하기에 배

¹⁰ 2010년 중국의 GDP(5조 8,786억 달러)가 일본의 GDP(5조 4,742억 달러)를 제쳐 세계 2위로 발돋움했으나, 중국의 1인당 GDP(\$4,412)는 일본 1인당 GDP(\$42,431)의 약 1/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1인당 GDP는 \$3,678로서 전 세계 213개국 중 124위를 차지하였다(중앙일보 11/02/16).

이징컨센서스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를 위한 전 세계적 포석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관한 한 중국은 미국과 함께 '규칙제정자(rule maker)'로서 공동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쟁이에 가깝다. 일본은 유사법제를 통한 재무장을 발판으로 기존의 경제적 능력에 보태어 외교적·군사적 입지를 넓히려 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더 이상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다섯 명의 총리가 바뀌었듯이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하다. 여전히 이의 집단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을 대신한 민주당은 국가 쇄신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위기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연합 정부를 제의했지만 자민당이나 공명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최근 쓰나미의 피해로 인해 일본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과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일본은 다시금 세계 경제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수출 국가이자 세계 9위의 무역 국가이다. 그리고 GDP에서 세계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여 왔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팽창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비록 중견국(middle power)이지만 분단 국가로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생과 조화를 위한 균형추 역할 이상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그럼에도 2010년 G-20 회의 주최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시도한 것처럼 오늘의 국제 관계와 세계 경제에서 일정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IV.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의 소명¹¹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부와 북부가 합쳐진 지역을 아우른다. 대륙국 중

¹¹ 이에 대해서는 임현진(2010: 174-177)을 참조.

국, 해양국 일본, 반도국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몽고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미국도 포함할 수 있다.¹² 이중 한국, 중국, 일본은 비교적 강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방향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안에 협조와 공존을 위한 문화와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세 나라 국민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한국과 중국, 일본은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중화질서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공통성이 지역적 통합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인적·물적 접촉과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고대 당의 중국, 신라의 한국, 나라·헤이안 시대의 일본이야말로 가장 내왕과 교역이 활발했던 예외적인 시기이다. 근세에 들어와 중국의 명은 14세기부터, 조선의 한국(동래의 왜관은 예외)은 15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나가사키는 예외)은 17세기 전반부터 역외 국가들에 대한 쇄국 정책을 쓰면서 세 나라 사이의 교역은 물론 왕래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본격적인 통교를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 서구에 대한 개항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고병익, 1995: 23-29).

둘이켜 보면, 한국이 고구려 패망 후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 중국을 정복하려는 의지를 지녔었다. 중국이 중화주의 아래 동북아를 자신의 생활 영역으로 여겼다면,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통해 대륙 전체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일국 중심의 대국적 팽창주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특징을 갖는다. 동북아 세 나라 중 서구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나라가 중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오히려 아시아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후발 제

¹² 자연지리적으로 미국은 알래스카를 지남으로써 북부 아시아와 이어지고,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서 북부 아시아와 맞닿는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각기 체결한 여러 조약, 협정 등을 통해 동북아와 지정학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두 나라는 태평양이라는 해양을 두고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서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

국주의를 추구했다. 한국의 식민화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이후 중국 대륙으로 진출을 꾀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오도된 실험이 지금 동북아에서 역사의 하중으로 남아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구소련의 대외정책적 이해 관계는 이미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1905)에 의해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러시아 또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치른 러일전쟁(1904)에서 패퇴할 때까지 한반도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국전쟁을 전기로 하여 미국과 소련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군사, 외교, 경제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미국은 미일안보조약(1951), 한미상호방위조약(1953),¹³ 미국의 대만 방위공약(1980), APEC에의 참여, 한미 FTA 체결 등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과 연관을 맺고 있다. 러시아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1961),¹⁴ 조러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2000) 등을 통해 북한,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다.¹⁵ 2000년대 초반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한 것도 미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북방동맹과 남방동맹이라는 대립적 구도 아래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에 한국의 역량이 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갈등으로부터 협력으로의 동북아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한국의 선도적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밀어내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동북아균형론으로 인해

¹³ 미국이 중국과 수교 이후 대만과의 방위조약 폐기 이후 새롭게 만든 것이다.

¹⁴ 이 조약은 러시아가 1995년 9월 북한에 폐기를 통보하고, 1996년 9월 북한으로부터의 연장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폐기되었다. 이를 대체한 신조약이 '조러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이다.

¹⁵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함께,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서로 가상의 적으로 삼고 각기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 군비를 축소하기는커녕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세 나라 사이의 상호협력을 해치고 있다.

미국과의 남방동맹으로부터 이탈하여 친중노선으로 전환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최근 한국은 한미동맹의 복원을 통해 다시금 중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적 대국화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호 협력을 가로막는 원인은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과거 식민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에 앞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경학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수상들의 신사 참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과 한국의 식민지화를 미화하는 왜곡도 불사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중국도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서남공정과 서북공정에 이은 동북공정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고유 역사를 부정하는 패권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토 분쟁 역시 동북아의 상호 협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다. 북방 4도의 소유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에 대한 일본의 반환 요청이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을 뜨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시아는 현재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이라는 중층적 갈등 아래 놓여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에 이은 북한의 핵무기 소유 의욕은 일본과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 핵개발을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통한 재무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주의적 우경화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역 패권을 향한 과도한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주의는 이 지역이 여전히 냉전 질서 아래 놓여 있다는 표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기회와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장 큰 도전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 중국, 일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은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1957

년 로마조약 체결 이후 반세기를 지나면서 EU는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유로존(Eurozone)의 위기로 인해 EU의 경제 통합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정치 통합이 흔들리면서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半)세기에 걸친 경제공동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넘어설 수 있는 범 유럽적인 법, 규범, 제도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국가연합 형태의 정치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 문명지대로서 유럽이 오랜 분열과 통합의 역사 아래 지역공동체의 수립을 위해서 적지 않은 체험과 학습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래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교류와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던 것은 EU와 다를 바 없겠지만, 강력한 국가주의의 전통 아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통합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는 유럽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Hyun-Chin Lim et al., 2004).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 APEC, ASEAN, ASEAN+3 등이 있다.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APEC은 느슨한 경제 협력체이다. 비록 1994년의 보고르(Bogor)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 자유화에 관한 일정이 합의되었지만(선진국은 2010년, 그리고 개도국은 2020년), APEC이 실질적인 경제 지역 블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난관이 앞에 가로 놓여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으로 인해 APEC의 발전적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다. 1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ASEAN(Association for South East Asian Nations)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회원국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SEAN은 경제약소국인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인식하여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APEC에 대해 유보적이다. ASEAN+3은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에 한국, 중국, 일본이 가담하는 형식으로 출범하였으나, 세 나라는 의사 결정권이 없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포럼에 그치고 있다. 다만 향후 아시아 지역에는 ASEAN+3과 APEC이 병존할 가능성이 짙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협력과 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건설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경향 아래 패권 경쟁은 이 지역에서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공동체 건설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APEC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이끌어내는데 조급해하기보다 세 나라가 일대일로 협상하는 쌍무주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세 나라 사이의 ANEAN(Association for North East Asian Nations)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공동체의 모색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국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대국적 팽창주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 여기서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재등장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시대적 소명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력 면에서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비(非)팽창주의적 입장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도덕적 차원에서 헤게모니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투고일: 2011년 10월 20일 | 심사일: 2011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8일

참고문헌

- 고병익. 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과 통합.”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강찬수. 2011. “지구씨, 어디 성한 데가 없네요.” 『중앙일보』(4월 22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85172(검색일: 2012. 1. 9).
- 위키피디아(Wikipedia), “연도별 반도체 생산 기업 순위.” http://ko.wikipedia.org/wiki/%EC%97%B0%EB%8F%84%EB%B3%84_%EB%B0%98%EB%8F%84%EC%B2%B4_%EA%B8%B0%EC%97%85_%EC%88%9C%EC%9C%84(검색일: 2012. 1. 9).
- 임현진. 2010. “동북아시아에서의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문화공동체의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24집.
- 장세정. 2010. “중국 세계 2위 vs 96위.” 『중앙일보』(2월 16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85172

- 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61316(검색일: 2012. 1. 9)
-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Abu-Lughod, Janet.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 D. 1250-1350*.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통계DB. <http://statistics.apec.org/>.
- Appadurai, Arjun. 1991.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e Economy." In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 Arrighi, Geovanni. 1983. *The Geometry of Imperialism*. London: Verso.
- _____.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21st Century*. London: Verso.
- Borrego, John. 1999. "Twenty-Fifty: The Hegemonic Moment of Global Capitalism." In V. Borndchier and C. Chase-Dunn, eds. *The Future of Global Conflict*. London and Thousand Oaks: Sage.
- Evans, Peter B. 2008. "Is an Alternative Globalization Possible?" *Politics and Society* 36(2).
- Featherstone, Mike. 1991. "Global Culture: An Introduction." In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 Frank, Andre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iedman, Thomas L. 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ieth-First Centu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Gilpin, Robert.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3. *The New Imper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dy, Paul.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93.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Vintage.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2001.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Lim, Hyun-Chin, Byungki Kim, and Jinho Chang. 2004. "Towards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East Asia: Differences

- from the European Union Experience.” *European Studies* 20, Winter.
- McNeill, William H. 1963.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8. “World Histor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West.” *Journal of World History* 9(2).
- Pieterse, Jan Nederveen. 2011. “Twenty-First Century Globalization-Propositions and Perspectives.” In Hyun-Chin Lim, W. Schafer and Suk-Man Hwang, eds. *New Asias: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Reich, Robert. 1991.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Century Capit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 Robertson, Roland. 1993.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Said, Edward.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mith, Adam. 1961.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Methuen.
- Toffler Associates. 2010. “40 for the Next 40: A Sampling of the Drivers of Change that will Shape Our World between Now and 2050.” <http://www.toffler.com/docs/40%20for%20the%20Next%2040%20101011%20FINAL.pdf> (검색일: 2012. 1. 9).
- World Steel Association 통계DB. <http://www.worldsteel.org/?action=stats&type=steel&period=latest&month=13&year=2010>.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통계DB. <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Abstract

Global Transformation, the Rise of Asia, and the Role of South Korea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formation of a regional community of North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irst, this paper interprets the rise of Asia not merely as a consequence entailed in response to the dominance of Western Modernity, but as a natural phenomenon of the transition of hegemony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Secondly, premised upon the notion that globalization, with its signification in diverse areas, is the central factor in this global transformation begot by the rise of Asia, this paper identifies the new possibilities and threats of globalization. Thirdly, after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developmental path of Asian countries and that of Europe, it examines characteristics that are common among Asian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Lastl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certain conflicts specific to Northeast Asia, I will suggest ways in which a Northeast Asian regional community may become possible. I believe that my method of taking both economic and cultural approaches toward the creation of a regional community is meaningful,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where their radical nationalist attitudes have resulted in minimal efforts for considering an economic integration. Above all,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a past victim in the history of expansionism

by powerful nations, will to able to contribute in this course by setting an example that proves cooperation through a non-expansionary stance is possible.

Keywords | globalization, the rise of Asia, a Northeast Asian regional community, non-expansionary stance, the role of South Korea